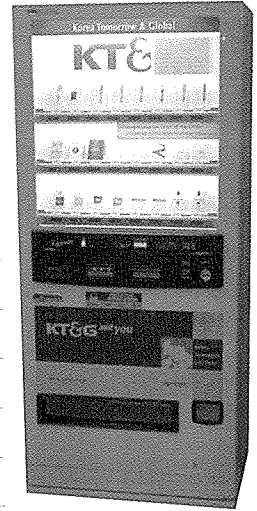


# 담배자판기 설치 불법화 정책, 산업계 강력 반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말 '제2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담배자판기 설치 불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개요는 담배자판기의 신규설치를 금지함으로써 기존 일부 운영되고 있는 담배자판기 시장을 점차적으로 소멸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추진 방침에 산업계는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성인인증담배자판기가 합법화된지 불과 2년여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에 이를 뿌리 뽑겠다는 정책이 발표되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산업계는 이같은 정책추진에 분개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자판기 설치 불법화 정책이 당장 추진될 것이 아닌 중장기 계획으로 아직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서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관련 산업계의 의견도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산업계의 동요를 알았는지 현재로서는 극히 신중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 그렇다 할지라도 담배자판기 설치 불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마당에 자발적으로 정책을 철회하기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 결국 피해 당사자인 자판기 산업계가 강력하게 정책추진을 막는 수밖에 없다. 산업계 생존권과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관련업계가 힘을 합하여 반드시 정책 철회를 이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논리가 중요하다. 왜 담배자판기 설치 불법화를 철회를 해야 하는지 충분한 명분과 타당성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담배자판기 설치 불법화를 왜 산업계에서 강력반대할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협회에서는 이 논리를 가지고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적극 대응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성인인증담배자판기 설치 불법화, 실효성이 크지 않다  
 현재 담배자판기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인인증장치를 채택하도록 하여 합법화된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았다. 그것도 모든 로케이션에 설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 흡연구역 등 극히 제한된 로케이션에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현재 필드에는 4000여대 가까운 성인인증 담배자판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판매되는 담배는 전체 담배판매의 0.8%선밖에 안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인인증 담배자판기를 철폐해 암발생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게 산업계의 시각이다. 진정으로 금연을 통한 암발생을 억제하겠다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려면 그 대상이 자판기뿐만이 아니라 일반 유통 축소 등의 대책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 유통은 그대로 두고 극히 일부분인 자판기만을 규제하려는 것은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조차 부당한 일이다.

만약 유통을 제한하여 흡연율을 낮추고자 한다면 일반 유통 분야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 전체유통의 1% 비중도 되지 않는 성인인증 담배자판기를 규제해야 전체 흡연율에 끼치는 효과는 거의 없다.

성인인증담배자판기의 역할과 비중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애꿎은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책은 명분과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게 산업계의 시각이다. 그렇기에 일반 유통의 규제 없이 담배자판기만을 규제하려는 정책은 산업계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 갑작스러운 철폐 정책 추진으로 인한 산업계 피해

지난 2004년 7월부터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령이 시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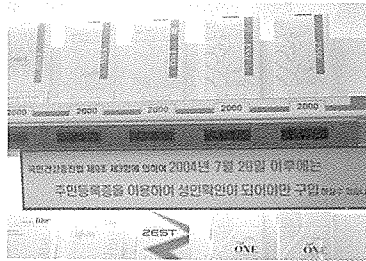
이법에 따라 산업계는 성인인증장치의 개발을 통해 이를 부착한 담배자판기를 상품화하여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담배자판기 철폐 정책이 급작스럽게 발표되어 산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성인인증 담배자판기 사업에 대한 운영자들의 투자 마인드가 크게 위축이 되고 있고, 해당 산업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도 타격을 받은 현상이 벌써부터 발생하고 있다.

산업계의 의견과 현실도 반영이 안 된 상황에서 그저 암 발생 억제라는 정책적 기조 하에 발표된 철폐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더 큰 산업계 피해가 예상된다. 만약 이 정책이 철회되지 않고 현실화되게 된다면 자판기 산업계는 커피자판기, 캔자판기에 다음 가는 시장을 잃게 되어 산업 경쟁력이 있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애써 개발한 기술들은 사장이 되게 되며, 담배자판기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을 맞게 된다. 과도한 규제가 산업을 초토화하여 크게 보면 국가경제에도 큰 손실을 끼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 성인인증 담배자판기는 세계적인 추세, 왜 우리나라만 역행하려 하는 가



가까운 일본의 경우 기 보급된 62만대의 담배자판기에 대해 2008년 4월까지 성인인증

카드를 도입한다는 계획 하에 교체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 정책적으로 성인인증담배자판기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7월 1일 담배값을 10~30엔 인상을 단행하였는데 30엔으로까지 증세분이 커진 것은 성인인증카드 신형 자판기의 도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또한 미국,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도 WHO 금연운동의 대안 및 청소년 흡연문제 해결을 위해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의무화하여 과거 담배자판기가 끼쳤던 위해요인을 해결하고, 독자적인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미 존재하는 유통 수단을 무조건적으로 철폐하는 정책은 세계적으로 봐도 찾아보기 힘들다. 담배자판기는 기술과 시스템의 발달에 따라 진화하며 얼마든지 위해요인을 해결할 수 있다. 우리보다 선진국들의 국가에서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합법화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있어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담배자판기 철폐를 진행한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암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일반 유통은 그대로 놔 두면서 성인인증 담

보건복지부의 성인인증 담배자판기에 대한 철폐 정책은 암발생 억제를 위한 입법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주는 과당규제라는 것이 산업계의 공통적 시각이다.

배자판기를 규제하겠다는 정책은 분명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 오히려 성인인증 담배자판기가 청소년 보호와 흡연을 억제하는 비법

산업계는 성인인증 담배자판기를 규제한다고 흡연율이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전체 담배유통의 1% 비중도 안 되는 담배자판기를 규제해서 흡연율 감소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자판기가 없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인유통이 사방에 팽배한 현실에서 단지 구입루트가 대체될 뿐이다.

이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성인인증 담배자판기의 흡연 억제측면을 주목해야 한다. 성인인증 담배자판기는 별도의 성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반 유인판매를 통해 담배를 구입하는 것보다 사용이 번거로워 일정 흡연 억제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인인증 담배자판기는 꼭 필요한 로케이션에서 일반 유통을 대체하여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수단이지 소비자가 그다지 선호하는 유통수단이 아니다.

아울러 성인인증 담배자판기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오히려 설치를 장려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담배구입 루트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없는 유인판매보다는 성인인증을 통해 100% 신뢰성과 정직성을 보장하는 성인인증 담배자판기의 설치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 실례로 편의점, 학교위생정화구역 등에 담배 유인판매를 금지시키고 성인인증 담배자판기만을 설치할 수 있게 한다면 청소년 담배구입의 제1루트는 사라지게 된다.

판매인의 도덕과 양심에 청소년 보호를 맡기는 시대는

끝났다. 기계가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 이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길이다.

### 성인인증 담배자판기 철폐, 자판기 산업계는 강력 반대



종합해 볼 때 보건복지부의 성인인증 담배자판기에 대한 철폐 정책은 암발생 억제를 위한 입법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주는 과당규제라는 것이 산업계의 공통적 시

각이다. 이보다는 구미 선진국들의 사례와 같이 성인인증 담배자판기의 긍정적인 설치효과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게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슬기로운 입법일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산업계의 이러한 입장을 적극 수렴하시어 성인인증담배자판기의 철폐 정책 추진을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계는 부당한 정책추진으로 미래지향적인 유통기기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응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